



GYEONGSANGNAM-DO

200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



경상남도
GYEONGNAM

01. 전자여권 등 여권법 전부개정법률 시행

현행

- 관용여권 접수·교부 : 외교통상부
-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및 대리 신청 가능
- 여권형태 : 사진전사식

달라지는 내용

- 관용여권 접수교부기관 도 및 전 시군 확대 : '08. 6. 29부터
- 본인 직접신청제 : '08. 8. 25부터 (예정)
 - 미성년자(12세~18세)의 경우 2촌 이내 대리 신청 가능
- 사진전사식 여권에서 전자여권으로 변경 : '08. 8. 25부터 (예정)
 - 지문정보 수록은 2010. 1. 1부터 시행
 - ※ 시군 여권사무 대행기관 현황(11개시군) 도청과 동일하게 발급
 - 마산, 진주, 진해, 통영, 사천, 김해, 밀양, 거제, 양산, 거창, 합천
 - 대행기관 외 9개 시군은 시군에서 서류접수 및 교부 (발급·도청)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여권법 전부개정법률
- 시행일 : 2008. 6. 29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행정과(☎211-2663)
- 외교통상부 여권과(☎02-2100-7593)

02. 미분양 주택 분양 시 거래세 75% 감면

현행

- 주택 유상 거래시 취득세 2%에서 1%로, 등록세 2%에서 1%로 50% 감면하여 과세

달라지는 내용

- 2008. 6.11이후 미분양 주택을 2009. 6.30일까지 취득(등기)하는 경우 취득세 1%에서 0.5%로 등록세 1.0%에서 0.5%로 각각 인하 (50% 감면 → 75% 감면)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「경상남도세 감면조례」 제11조 제4항
- 시행일 : 2008. 7. 3(예정)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세정과(☎211-2853)
-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(☎02-2100-3940)

03. 쇠고기 이력 추적제(Traceability) 전면시행

현행

- 참여 브랜드·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('04.10월부터)
 - 출생·이동·귀표부착·개체식별번호 표시 등 자율적 시행
 - 미 이행시 법적 강제조치 곤란
- '08년 우리 도 참여 : 212천두 (경남 한우사육두수 245천두의 88%)

달라지는 내용

- 모든 소(한우·육우)에 대해 출생·이동·출하·폐사사항 신고 법제화
- 출생·수입 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 및 귀표 부착 의무화
 - 위반 시 : 법적 제재(벌금, 과태료부과)
- 쇠고기 위생·안전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, 소비자는 구입 쇠고기의 이력을 투명하게 알 수 있어 국내산 쇠고기 소비 확대 등 소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
 - 동 법률 하위법령(시행령 및 시행규칙)은 '08. 9월 공포 예정
- 시행일 : 2008. 12. 22
 - ※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계속 추진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축산과(☎211-3661, 3665)
-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(☎02-500-2110)

04. 닭·오리고기 포장유통 확대 시행

현행

- 유통과정 중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고 수입육과 구별이 용이하도록 연간 1일 평균도축 8만수 이상인 닭, 오리 도축장 포장유통 의무화

달라지는 내용

- 닭, 오리고기 포장유통 의무 대상을 전년도 연간 실제 도축한 일수의 1일 평균도축수가 5만 이상 영업자로 확대 시행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12조의3
- 시행일 : 2008. 12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축산과(☎211-3683)
- 농림부 축산물위생담당(☎02-500-1923)

05. 도축장 구조조정법 시행

현행

- 법률 제정 2008. 6.13(법률 제9118호)

달라지는 내용

- 도축장 구조조정 추진 협의회 설립(법인) 운영
- 도축장 구조조정자금 조성 등
 - 협의회에 소속된 도축장경영자의 분담금
 - 도축장경영자 외의 자의 출연금
 - 조정자금의 운영수익금 등 그 밖의 수입
- 분담금의 한도 : 가축 또는 축산물의 평균 거래가격의 1천분의 3이하
- 조정자금의 신청
 - 폐업 희망자는 증빙서류를 첨부 협의회에 조정자금 지급 신청
- 도축업의 영업제한
 - 조정자금을 지급받은 도축장은 동일 장소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 동안 도축업을 할 수 없음
- 축산시책의 우선지원
 - 협의회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납부한 도축장경영자에 대하여 우선 지원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도축장 구조조정법
- 시행일 : 2008. 12. 14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축산과(☎211-3683)
- 농림부 축산물위생담당(☎02-500-1923)

06. 축산물유통 전문판매업 시행

현행

-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.5.9(대통령령 제20779호)

달라지는 내용

-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신설(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)
 - 축산물(포장육, 식육·유·알가공품)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하는 영업
- 영업신고 : 시장·군수에게 신고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
- 시행일 : 2008. 12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축산과(☎211-3683)
- 농림부 축산물위생담당(☎02-500-1923)

07. 소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금 상향 조정

현행

- 브루셀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·정밀검사 결과가 있거나 임상증상이 있어 살처분된 소의 경우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5분의 3(60%)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

달라지는 내용

- 가축평가액의 5분의 4(80%)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상향 조정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11조
- 시행일 : 2008. 7. 1(공포, 시행)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축산과(☎211-3694)
- 농림수산식품부 동물 방역팀(☎02-500-2127)

08. 소형선박저당법 시행

현행

-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「선박등기법」을 적용하여 선박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시행하고 있음

달라지는 내용

- 소형선박법 시행으로 현행 등기대상인「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」외에도 등기대상을 확대 시행
- 적용 대상
 - 선박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,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(일부 선박 제외)
 - 어선법에 의한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
 - 수산레저안전법에 의한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모터보트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소형선박저당법 : 2008. 7. 1 (제정 2007. 8. 3)
- 소형선박저당법 시행령 : 2008. 7. 1 (제정 2008. 6. 25)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어업진흥과(☎211-3815)
- 국토해양부 물류항만실 해사기술과(☎02-2110-8587)

09.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 설치 신고

달라지는 내용

- 변압기, 콘덴서 등 전기기기 내 절연유에 함유된 오염물질(PCBs) 적정 관리를 위해 관할 관청에 신고토록 함
 - 2008. 7. 27일까지 오염도 검사결과 등을 기재하여 시·군 환경부서에 신고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, 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
- 시행일 : 2008. 7. 3(예정)

관련부서

- 시·군 환경업무 담당부서
- 경상남도 환경정책과(☎055-211-4131), 환경지원과(☎055-211-4221)

10. 폐석면 관리기준 강화

현행

- 석면 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있는 것을 지정폐기물로 분류

달라지는 내용

- 폐석면의 석면함량기준(1%이상)을 정하고 비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관리

폐석면 배출자 조치사항

- 지정폐기물배출자는(100kg이상 배출하는 경우) 처리전 처리계획 확인을 받아야 함(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)
 - 지방환경청 : 대기,수질, 소음·진동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·운영사업장
 - 지자체 : 지방환경청 관할 이외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
- 석면량, 해체 및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)
-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·멸실신고서에 석면함유 여부를 기재하고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(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및 별지제25호서식)



➡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, 별표 1
- 시 행 일 : 2008. 7. 4

➡ 관련부서

- 경상남도 환경정책과(☎055-211-4135)
- 환경부 산업폐기물과(☎02-2110-6943)

11.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 개선



➡ 현 행

- 1회용 종이컵, 봉투·쇼핑백 등 18개 제품에 대한 사용억제, 무상 제공 금지

➡ 달라지는 내용

- 종이컵, 종이봉투·종이쇼핑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
 - － 식품접객업소,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허용 및 대규모점포, 도·소매업소의 종이봉투·종이쇼핑백 무상제공 가능
- 대규모점포외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자의 합성수지 도시락용기 사용 허용

➡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
- 시 행 일 : 2008. 7. 1

➡ 관련부서

- 경상남도 환경정책과(☎055-211-4134)
-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(☎02-2110-6918)



12. 산지이용 규제 완화



현행

- ◉ 보전산지 편입비율 : 50%~75%
- ◉ 관광·휴양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
- ◉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- 산채 등 27개 품목
- ◉ 산지전용 허가예정지와 종전의 산지전용지가 직선거리 500m 이내에 있는 경우 허가 예정지와 기존 전용지의 합산 면적이 3ha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연접개발 제한
- ◉ 200ha 미만은 시·도지사, 200ha 이상은 산림청장이 산지전용허가
- ◉ '계획상도로'를 이용한 산지전용허가 불인정
- ◉ 토석채취 허가권한
 - 시·도지사 : 7~10ha
 - 시장·군수·구청장 : 7ha 미만
- ◉ 산지전용시 산지경관 심의와 자연경관 심의를 별도 심의

달라지는 내용

- ◉ 보전산지 편입비율 확대 : 시·군별 보전산지 면적비율
- ◉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산지 편입면적 30ha 미만의 관광·휴양 시설은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
- ◉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임업용산지 안에서 허용되는 임산물 재배 품목 확대 - 복분자 등 57개 품목(30개 품목 추가)

- ◉ 연접제한시 적용되던 면적합산 기준 거리를 250m로 대폭 축소
- ◉ 자기소유산지에 실거주목적의 660㎡ 미만의 단독주택,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해서는 연접개발 제한 제외
- ◉ 개발수요가 많은 도시지역·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면적에 관계 없이 시·도지사가 산지전용허가
- ◉ 산지전용 허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도의 진입로개설을 의무화 하지 않고 기 허가된 '계획상 도로'의 공동사용 허용
- ◉ 토석채취 허가권한 위임 확대
 - 시·도지사 : 10~20ha
 - 시장·군수·구청장 : 10ha 미만
- ◉ 산지경관 심의를 자연경관 심의로 통합·운영하여 기업의 중복적 경관심의 부담을 완화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◉ 관련법규 :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및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
- ◉ 시행일 : 2008. 7. (예정)

관련부서

- 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295)
- ◉ 산림청 산지제도과(☎042-481-4141)



13. 도시림 대상지역 조정

현행

-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시의 '면' 지역까지 포함

달라지는 내용

- 도시림 현황통계 및 실태조사시 조사대상을 모든 '읍' 이상의 지역로 변경('면' 지역은 제외)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시행일 : 2008. 6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183)
- 산림청 도시숲경관과(☎042-481-4224)

14. 입목벌채 · 굴취제도 개선

현행

- 입목의 벌채는 수종별 기준벌기령이 지나야 벌채 가능
- 재해의 예방 · 복구, 농가건축 및 수리, 농업 · 임업 · 축산업 · 수산업 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임의 입목 벌채 범위
 - 산주 : 5m³
 - 독림가 · 후계자 : 50m³
-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m²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신고로 굴취 · 채취
- 입목의 벌채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구비서류
 - 벌채구역도
- 입목벌채 허가 또는 신고의 경우 산림경영계획과 2할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변경허가

달라지는 내용

- 벌채 가능년수 이전이라도 생장이 빠른 나무는 벌채 허용
 -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인 나무가 50% 이상인 경우
- 산주의 소득증대 및 국산재 이용 촉진을 위해 임의로 입목 벌채 할 수 있는 범위 확대
 - 산주 : 10m³
 - 독림가 · 후계자 : 80m³
- 지목이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5천m² 미만인 과수원의 입목인 경우 임의로 굴취 · 채취



- ◉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입목벌채 허가서류 완화
 - 벌채구역도 또는 GPS장비를 이용한 실측도
- ◉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시업촉진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해 산림경영 계획에 따른 시업신고 수량변경 대상 변동률을 3할 이상으로 상향조정

➡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◉ 관련법규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- ◉ 시 행 일 : 2008. 6. 22

➡ 관련부서

- 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243)
- ◉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(☎042-481-4196)
- ◉ 산림청 목재소득과(☎042-481-4196)

15. 산림경영기술자의 실무경력 인정범위 확대

➡ 현 행

- ◉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 배치 기준
 - 산림경영기술자 자격 취득후 해당분야 실무 경력만 인정

➡ 달라지는 내용

- ◉ 숲가꾸기 분야의 책임기술자 감리원의 실무경력 확대
 - 1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산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으로 확대
 - 2급 산림경영기술자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해당분야 실무경력 인정

➡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◉ 관련법규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, 동법 시행령 제26조제4항, 동법 시행규칙 제31조
- ◉ 시 행 일 : 2008. 6. 22

➡ 관련부서

- 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285)
- ◉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(☎042-481-4196)

16. 산림사업 법인의 등록 · 관리

현행

-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· 관리업무를 산림청장이 관장
- 산림사업인의 종류
 - 자연휴양림 조성

달라지는 내용

-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· 관리업무를 시 · 도지사에게 위임
- 산림사업법인 종류를 세분화
 - 자연휴양림 조성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
 - 도시림 등 조성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
- 시행일 : 2008. 6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253)
-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(☎042-481-4195)

17. 국유림 이용 활성화

현행

- 각종 개발사업 요존국유림 편입기준
 - 개발촉진지역 내의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%미만으로서 30ha미만
 - 일반개발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%미만으로서 10ha미만
- 공동산림사업 수행주체 및 사업범위
 - 사업주체 :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법인
 - 사업범위 : 산림소득사업, 산림휴양시설, 산림연구사업 등
- 국유림과 공 · 사유림 교환조건
 -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이상

달라지는 내용

- 각종 개발사업시 요존국유림 편입비율 확대
 - 개발촉진지역 내의 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%미만으로서 50ha미만
 - 일반개발사업 : 사업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%미만으로서 20ha미만
- 투자여건 개선 및 공동산림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체 및 사업범위 확대
 - 사업주체 :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
 -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 이 해당 자본금이나 기본재산의 3분의 1이상을 재출자하여 설립한 법인



-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산림·환경관련 국제기구 추가
- 사업범위에 수목장림, 도시숲, 신재생에너지설비, 산림레포츠시설, 산림 관광레저사업 등을 추가

④ 요존국유림 사용허가 대상 확대

-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공공단체·정부투자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 사업까지 사용허가 대상 확대

④ 국유림과 공·사유림 교환조건 완화

- 국유림 확대 집단화, 지지체 공용·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2분의 1이상 일때도 교환 가능

④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④ 관련법규 :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·규칙
- ④ 시 행 일 : 2008. 7.

④ 관련부서

- ④ 경상남도 산림녹지과(☎211-4255)
- ④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(☎042-481-4091)

18. 산업단지 개발 도와주고 빨라진다 (처리기간 단축 및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)

④ 현 행

- ④ 산업단지 인·허가시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투자자 불편 초래
- ④ 산업단지 인·허가의 처리기간 장기간(2~4년)으로 개발의 어려움 호소

④ 달라지는 내용

- ④ 산업단지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산업단지 인·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 제공
- ④ 산업단지 인·허가절차가 2단계(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)에서 1 단계(산업단지계획승인)로, 기간은 2~4년에서 6개월로 단축

④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④ 관련법규 :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특례법
- ④ 시 행 일 : 2008. 9. 5(예정)

④ 관련부서

- ④ 경상남도 도시계획과(☎211-4362)
- ④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(☎02-2100-8181)



19.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



➡ 추진배경

-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·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,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

➡ 사업내용

- 대 상 자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로서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
- 보험급여 내용
 - 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서비스
 - 시설급여 :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
 - 특별현금급여 :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는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급여 등
- 재원조달
 - 장기요양보험료 : 보험료 납부자는 건강보험납부자(직장·지역가입자)이며,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(4.05%)을 곱하여 산정
 - 국가부담 :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
 - 본인부담 : 시설급여는 20%, 재가급여는 15% (저소득층은 1/2 경감, 국민기초생활수급 노인은 무료)

○ 서비스 이용체계

- 서비스신청(본인, 가족 등) → 방문조사(건강보험관리공단) → 등급판정(등급판정위원회) →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통보(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신청자에게) → 장기요양급여의 시작

➡ 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령 :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시 행 일 : 2008. 7. 1

➡ 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(☎ 055-211-5143)

20.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확대

현행

- ◉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노인단독 월 40만원, 노인부부 월 64만원) 이하인 70세 이상 노인의 60%에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 월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(1인 월 최고 84,000원)
 - 1단계('08. 1월) : 70세 이상
 - 2단계('08. 7월) : 65세 이상
 - ※ 소득인정액=소득+재산의 소득환산액(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은 고려 않음)

달라지는 내용

- ◉ 지급대상자 범위 확대 : 70세 이상 → 65세 이상
 - 1단계(상반기) 지급대상 : 70세이상 노인인구의 60%
 - 2단계(하반기) 지급대상 : 65세이상 노인인구의 60%
- ◉ 대상자수 증가 : 78천명 예상
 - 1단계(상반기) 지급대상자 : 162천명
 - 2단계(하반기) 지급대상자 : 240천명(예상)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◉ 관련법규 : 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
- ◉ 시행일 : 2008. 7. 1(2단계) ※ 1단계 시행일 : 2008. 1. 1

관련부서

- ◉ 경상남도 사회장애인복지과(☎211-5134)
- ◉ 보건복지가족부 기초노령연금과(☎02-2023-8376)

21. 실종 아동·장애인 일시보호센터 지정 운영

현행

- ◉ 실종 아동·장애인 발생시 조기발견 체계가 전무한 실정임

달라지는 내용

- ◉ 실종 아동·장애인 발생시 조기 발견체계 구축을 위한 일시보호 센터 지정 운영(경남 3개소)

일시보호 센터명	시설종류	시설장 (연락처)	시설 소재지	보호 대상자	정원	관할지역
동보원	아동양육 시설	김영남 (282-6434)	창원시 사파동 116	실종아동	105명	마산, 창원 진해, 양산 김해, 밀양 창녕, 함안 고성, 통영 거제(11개 시군)
진주기독교아원	아동양육 시설	정순희 (746-3622)	진주시 평거동 386번지	실종아동	79명	진주, 사천 남해, 하동 산청, 함양 거창, 의령 합천(9개시군)
무궁애학원	장애인 생활시설	박민현 (382-9856)	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935-4	실종 장애인	90명	20개 시군

- ◉ 시행일 : 2008. 4.

관련부서

- ◉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(☎211-5254)
- ◉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(☎02-2023-8825)

22. 실종아동발견을 위한 출입·조사시 가족동반제도 실시

현행

-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0조에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소속 공무원이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 실시

달라지는 내용

- 최근 아동·장애인 실종·유괴사건 증대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관계장소 출입·조사시 소속공무원 외 실종아동의 가족 동반이 가능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10조
- 시행일 : 2008. 9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(☎211-5254)
-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보호과(☎02-2023-8824)

23. 「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」시행

현행

- 50인 이상 「보육시설 급식 원산지 표시제」 미 시행

달라지는 내용

- 「농산물품질관리법」 개정안의 국회 통과('08.5.22)로 50인 이상 보육시설은 축산물(쇠고기, 돼지고기, 닭고기)의 급식 원산지 표시 의무화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농산물품질관리법(제15조의 2)
- 시행일
 - 쇠고기 : 2008. 7월부터
 - 돼지고기·닭고기 : 2008. 12. 22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 저출산대책팀(☎211-5265)
-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지원과(☎02-2023-8951)



24.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절차변경



현행

- 취학연령이 '3월1일~익년 2월말'로서 1,2월생을 둔 학부모들이 아동의 부적응을 우려하여 유예하는 경향이 많음
- 조기입학 및 입학유예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
- 불법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서류의 미비 등으로 국내학교 입학 또는 전학이 어려운 실정임
- 취학아동 명부는 11월 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취학통지는 익년 2월 25일까지 통지함.

사업내용

- 취학연령 기준변경 : '3월1일~익년 2월말'을 '1월1일~12월31일'로 변경
 - 2009. 3. 1. 입학 : 2002. 3. 1 ~ 2002. 12. 31생
 - 2010. 3. 1. 입학 : 2003. 1. 1 ~ 2003. 12. 31생
- 학부모가 입학적령기 1년 전·후로 자유롭게 입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입학제도와 취학유예제도 간소화
 - 매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읍·면·동사무소에 별도의 서류 없이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
- 주민등록 말소, 무호적, 국내 불법 체류 아동의 경우 입학 가능
 - 임대차계약서, 거주확인 인우보증서, 출입국 사실증명, 기초생활보장보호 등을 통해 거주사실 확인시 입학 가능

관련법규 및 시행일

- 관련법규 :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
- 시행일 : 2008. 7. 1

관련부서

-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운영지원과(☎ 055-268-1337)